

#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 주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Plan 1.5* 플랜1.5,  노회찬재단  
 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정무위원회)



# 목차

## [인사말]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5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	7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9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11

## [좌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발제]

- 발제1. 금융산업의 기후대응과 노동조합의 역할 : 기후퇴직연금 캠페인 .....	13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	
- 발제2. 금융산업의 기후공시 : Scope 3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27
김태한   한국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 [토론]

- 토론1. 이기철 수석부위원장(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39
- 토론2. 최용환 팀장(NH-Amundi 자산운용 ESG리서치) .....	45
- 토론3. 지현영 부소장(녹색전환연구소) .....	49
- 토론4. 장지원 사무관(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53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재진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투자를 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 ‘기후금융’이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기업과 사회의 탄소 배출을 경감하고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관련한 금융상품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기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여,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기후공시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업 배출량의 평균 4분의3 이상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중대한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떤 활동에 집중되는지를 투자자가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스코프 3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또한 금융 노동자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 방안의 하나가 기후퇴직연금 운동이

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금융노조는 올해 조합원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퇴직연금 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후금융 교육을 플랜 1.5와 함께 진행해 왔고 내년에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기후 친화적인 투자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본을 조성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적 이익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금융 노동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노회찬 재단과 플랜 1.5, 그리고 박지혜 의원님과 신장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박창규**

안녕하세요.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박창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천이 요구되고 기후정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플랜 1.5, 박지혜의원, 신장식의원과 함께 오늘의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언제부턴가 정부 문서에서도 ‘기후위기 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상황인식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의 정부 정책 정도로는 기후위기 대응책이라고 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8월말에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효성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2020년 1월에 각국 중앙은행의 국제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시민사회를 위협할 뿐 아니라 화폐와 금융의 안정성까지 흔들며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의 재앙적 영향을 피하려면 기술 혁신과 규제 및 사회 규범의 주요 변화를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향한 즉각적이고 야심찬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발표된 IPCC 제6차 종합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이행될 선택과 행동이 이후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금융의 역할이 대단히 크고 중요합니다. 금융정책에 의한 ‘그린 워싱’ 규제와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투자규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금융이 지역에 기반 한 녹색산업 촉진과 녹색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정부 때 마무리되지 못했던 녹색정책금융기관의 설립, 퇴직연금 등 민간 자금의 녹색투자기금화,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 정책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이렇게 산적한 정책과제들을 도입하기 위한 공론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님, 김태한 한국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님을 비롯한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지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오늘 ‘금융산업의 기후 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노회찬재단, 사무금융노조, 그리고 플랜 1.5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발표된 UN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정책을 지속할 경우 전 세계는 금세기 말까지 3.1℃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금융 흐름의 전환은 그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금융은 단순히 자본을 운용하는 역할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 공시에 ‘스코프3 (Scope 3)’를 포함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의 스코프3 배출량은 스코프1과 스코프2를 합친 배출량의 6배나 됩니다. 스코프3 공시가 의무화된다면, 기업과 금융기관의 탄소 배출 관련 리스크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후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은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융산업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기후퇴직연금"의 확산 방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이 노동권 보호를 넘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실질

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비전을 나누고, 실행할 방안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 장 식

안녕하십니까?

강자에게 정의, 시민에게 권리를, 금융산업에 공공성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오늘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토론회를 함께 공동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님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플랜1.5, 노회찬재단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와 김태한 한국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그리고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님,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이기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님, 최용환 NH-Amundi 자산운용 ESG 리서치 팀장님,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 사무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상관측 이래 최초’라는 타이틀의 이상 현상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9)가 개막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WMO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2024년을 지구 평균 기온 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했고,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이 1.54도 상승해 기후 재앙 마지노선인 1.5도를 일시적으로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

금, 인류는 기후위기 시대가 아닌 기후재앙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자연환경적 측면만의 위기가 아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생존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기후위기는 자본주의 시장 전체와 금융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시스템적 금융위기 발생, 일명 그린스완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금융산업을 통해 인류가 생산하는 직간접적 제품과 생산과정을 포함한 금융배출량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은 175백만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선진국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앞다투어 금융산업의 투자 규제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기업의 기후공시와 지속가능성 공시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후재앙을 뛰어넘기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새로운 제도개선 방향과 내용은 꼼꼼히 챙겨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고 새로 다가오는 2025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산업의 기후대응과 노동조합의 역할 : 기후퇴직연금 캠페인

한 수 연  
플랜1.5 정책활동가



Plan 1.5

## 금융산업의 기후대응과 노동조합의 역할

---

한수연 정책활동가

2024. 12. 03.

### 1. 기후위기와 금융산업

---

## I. 기후위기와 금융산업

Plan 1.5

###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



#### 물리적 위험 |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태풍,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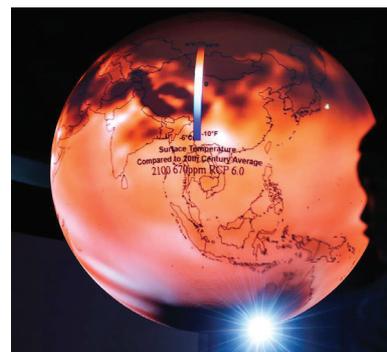
- 녹색금융협약체(NGFS) “기후변화 방지하면, 물리적 위험으로 2050년 세계 GDP 15% 감소”
- 물리적 위험은 가계, 기업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금융 리스크도 커짐
- 보험업계 손실 급등 : 물리적 위험으로 인한 전 세계 보험업계 손실액은 약 150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손실액보다 4배 급등 (2022년 기준,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
- 은행의 재정적 충격 : 대출 손실·대차대조표 악화 등 위험 요인 야기
- 탄소중립 사회로 조기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물리적 위험으로 인한 경제 피해

3

## I. 기후위기와 금융산업

Plan 1.5

###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



#### 전환위험 |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법, 제도, 기술, 시장, 인식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무적 위험

- 전 세계 정책 및 제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편되는 가운데,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장 경쟁력 하락을 겪게 되고, 이는 곧 이 기업들에 대한 노출(익스포저)이 많은 금융기관들의 위험으로 이어짐
-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로 화석연료는 '좌초자산'이 될 것
-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제품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비용과 EU 생산비용 차이만큼 관세 의무화) 등 탄소 무역규제에 영향을 받는 국내 산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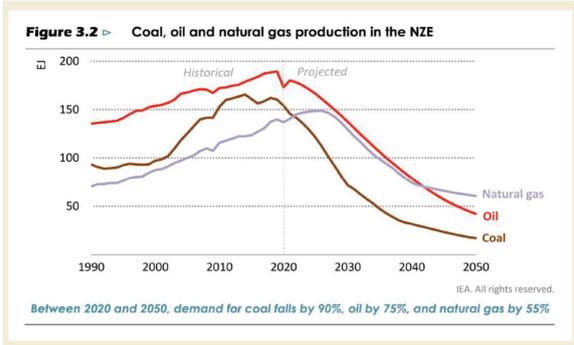
4

# I. 기후위기와 금융산업

Plan 1.5

##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

회사	등급	
	조정 전	조정 후
체브론(Chevron Corp)	AA/Negative/A-1+	AA/Watch Neg/A-1*
엑손모빌(Exxon Mobil Corp)	AA/Negative/A-1+	AA/Watch Neg/A-1*
임페리얼 오일(Imperial Oil Ltd)	AA/Negative/A-1+	AA/Watch Neg/A-1*
로열다치셀(Royal Dutch Shell PLC)	AA-/Negative/A-1+	AA-/Watch Neg/A-1*
셸에너지(Shell Energy North America)	A+/Watch Neg/-	A-/Negative/-
토탈(TOTAL SE)	A+/Watch Neg/A-1	A-/Negative/A-1
중국 석유화학(China Petrochemical Corp)	A+/Stable/A-1	A-/Watch Neg/A-1
중국 석유화학(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	A+/Stable/-	A-/Watch Neg/-
중국 국립해양석유공사(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	A+/Stable/-	A-/Watch Neg/-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Ltd)	A+/Stable/-	A-/Watch Neg/-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	A/Stable/A-1	A/Watch Neg/A-1*
우드사이드(Woodside Petroleum Ltd)	BBB+/Negative/-	BBB+/Watch Neg/-
캐나다 천연자원 주식회사(Canadian Natural Resources Ltd)	BBB/Stable/A-2	BBB/Watch Neg/A-2*



###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기후위기발 금융 리스크

- 2021년, 석유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한 S&P “석유, 가스 산업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시장 수축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 국제에너지기구(IEA),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화석연료 수요가 석탄 90%, 석유 75%, 가스 55% 감소할 것으로 예측

# I. 기후위기와 금융산업

Plan 1.5

## 녹색백조



### The green swan

Central banking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Patrick BOLTON - Morgan DESPRES - Luiz Awazu PEREIRA DA SILVA  
Frédéric SAMAMA - Romain SVARTZMAN

January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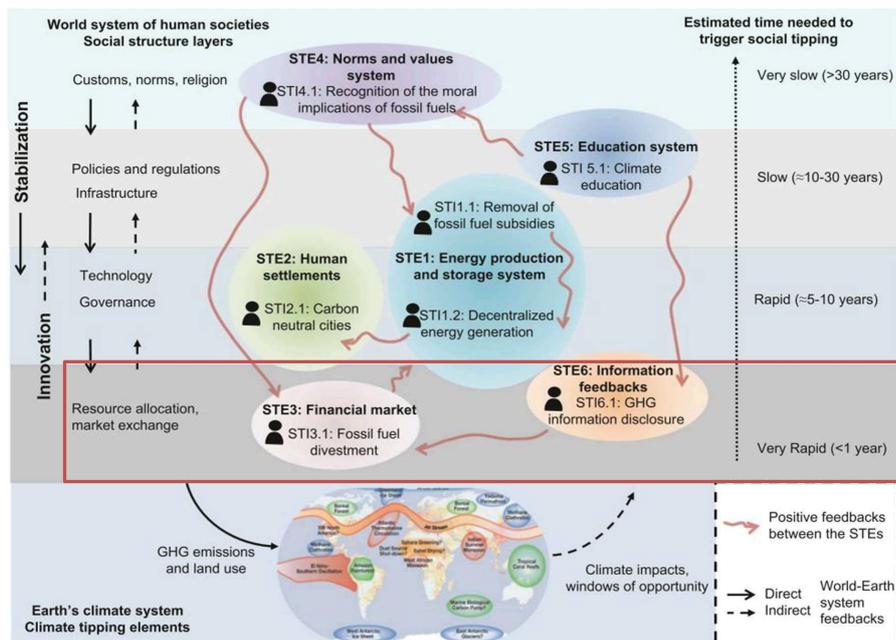
- 그린스완 : 2020년 국제결제은행(BIS)이 명명한 기후위기로 인한 시스템적 금융위기
- 기후위기는 글로벌 금융체계의 정상적 작동을 무너뜨리고, 실물경제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체계적 위험으로 작용
-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 확률 분포는 정규분포 곡선이 아닌 긴 꼬리 모양의 분포곡선임. 즉, 발생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어 일반적인 금융위기보다 더 복잡하고 피해가 막대함
- 기후위기 = 금융위기
- 국제결제은행은 '녹색백조' 보고서에서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II. 기후금융 - 금융산업의 기후대응

## II. 기후금융 - 금융산업의 기후대응

기후위기 시대의 금융, 기후금융

Plan 1.5



## II. 기후금융 – 금융산업의 기후대응

Plan 1.5

기후위기 시대의 금융, 기후금융

### 금융

자금을 중개하고 미래 가치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

### 기후금융

- 개념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 실천적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활동, 기후불평등을 심화하는 경제활동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불평등을 줄이는 활동에 금융지원을 하는 금융
- 기후위기로 인한 요소를 반영해 금융시장 위험 평가 방식을 재편, 이를 반영한 투자방향의 재조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규제와 정책 강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미래 가치를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9

## II. 기후금융 – 금융산업의 기후대응

Plan 1.5

금융배출량 감축의 첫 단계, 탈화석연료 투자



“우리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재생에너지  
대체

화석연료  
추가개발

10

## II. 기후금융 – 금융산업의 기후대응

Plan 1.5

기후금융 흐름 주도한 해외 공적연기금



Akademiker Pension



### 덴마크 연기금 대표 “앞으로 석탄 통한 수익 ‘0’이 될 것”

[제27차 기후변화총회]

인터뷰 | 덴마크 연기금 PKA 대표 존 존슨

김규남 기자

수정 2022-12-01 19:58 등록 2022-11-23 10:00



- 프랑스 FRR - 매출 1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을 석탄기업으로 분류하고, 투자 제한
- 스웨덴 AP7 - 파리협정 등 기후 국제 규범을 위반한 기업을 투자 배제 대상으로 선정
- 덴마크 대니카 펜션 - 신규 석탄 발전 및 광산 사업 개발하는 기업 및, 매출의 5%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 투자 제한

11

## II. 기후금융 – 금융산업의 기후대응

Plan 1.5

금융배출량 감축의 첫 단계, 탈화석연료 투자



- 화석연료는 인간의 경제활동 중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막대한 영역
- 화석연료 중에서도 배출계수가 가장 높은 석탄에 대한 금융지원 제한에서 시작해, 석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화석연료 투자를 이뤄야 함
- 궁극적으로는 자산 탄소중립으로 나아가야 함. 탄소중립이 법(탄소중립기본법)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자산 탄소중립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연적임

12

## II. 기후금융 – 금융산업의 기후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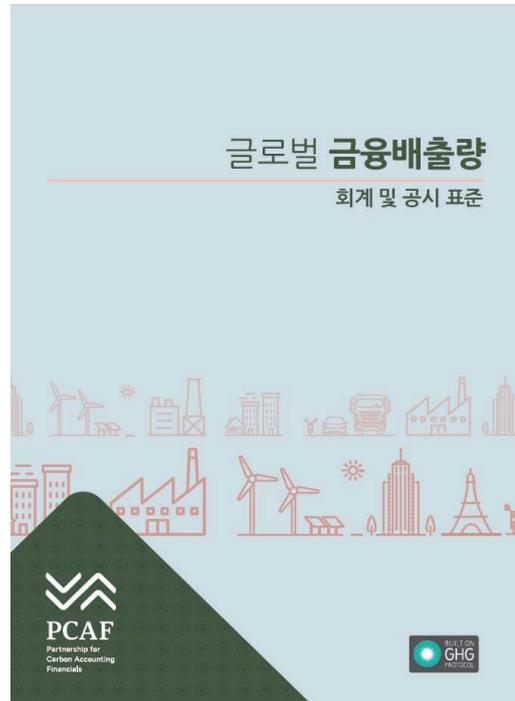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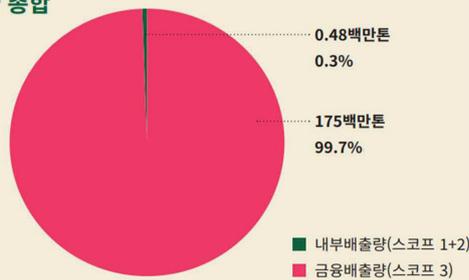
Plan 1.5

금융지원을 통한 금융배출량 감축 필요

### 스코프(Scope) 1, 2, 3 단계

Scope 1 직접배출	Scope 2 간접배출	Scope 3 기타 간접배출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 자산 포트폴리오까지 포함한 총 외부 간접 배출

### 한국 5대 금융지주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13

## III. 기후퇴직연금 캠페인

### III. 기후퇴직연금 캠페인

Plan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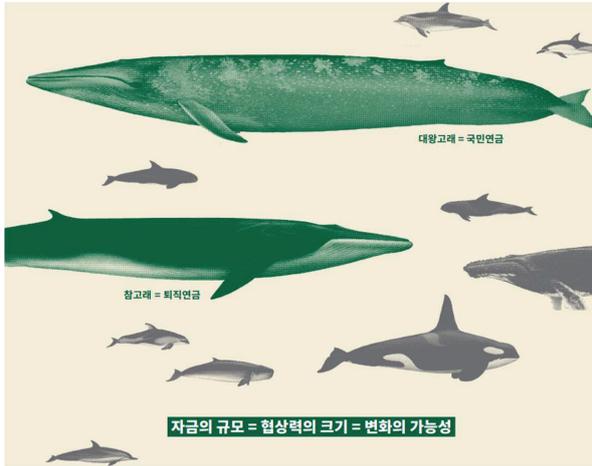
노동자가 기획 · 주도 · 실천하는 기후금융 캠페인

#### 기후금융

- 기후금융은 필연적으로 수동적일 수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미래 가치를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기후금융의 핵심

#### 기후퇴직연금

노동자가 기획하고, 주도, 실천하는 기후 대응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3년...  
"오히려 석탄 산업 투자 늘린 모순된 행보"  
투자 배제기준안 의결 계속 미뤄

국민연금 운용 자산 : 1000조 원

전체 퇴직연금 자산 : 400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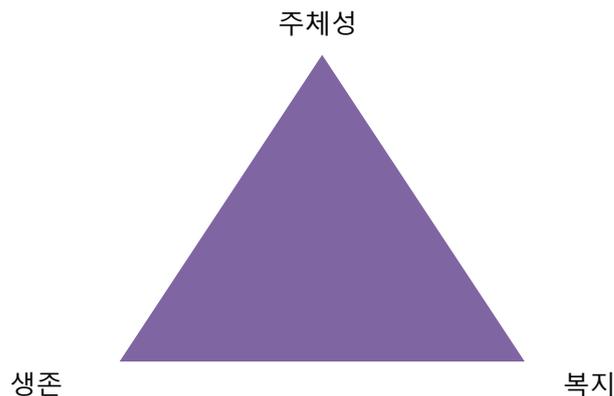
자금의 규모 = 협상력의 크기 = 변화의 가능성

15

### III. 기후퇴직연금 캠페인

Plan 1.5

왜 퇴직연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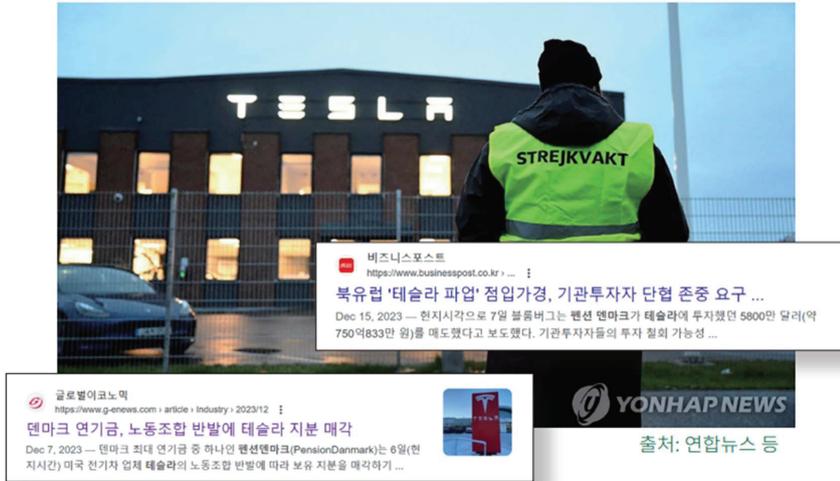
- 주체성 - 기후위기 당사자인 노동자가 자신의 가장 큰 목돈인 '퇴직연금'으로 기후 미래를 기획하고 주도, 실천
- 생존 - 금융산업이 기후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 문제는 경제 안정성, 일자리의 안정성과도 연결
- 복지 - 퇴직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하면, 장기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임. 가입자인 노동자의 노후 보장, 복리를 위해 퇴직연금은 기후금융으로 관리돼야 함

16

### III. 기후퇴직연금 캠페인

Plan 1.5

#### 왜 노동조합인가



-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노동자의 소유 → 운용지시권
- 퇴직연금은 대표적인 장기투자상품 →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후 리스크 관리 필요
- 퇴직연금은 초대형 자산 → 협상력 조직 가능

### III. 기후퇴직연금 캠페인

Plan 1.5

#### 해외 사례 (미국)



#### 콜로라도 연기금, 10년 동안 화석연료 투자로 27억 달러 손실

A 김환이 editor | © 입력 2023.01.31 10:31 | © 수정 2023.10.02 00:42 | 댓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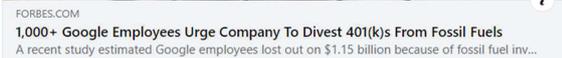
미국 콜로라도 연기금이 화석 연료 투자로 인해 최근 10년 간 27억달러(약 3조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연금 투자자의 손실로 이를 환산하면 1인당 4161달러(약 511만원), 손실률은 21.8%로 추정된다.



#### 구글 직원 1천명, 구글에 탈화석연료 퇴직연금 요구

“지난 10년간 화석연료 투자로 구글 직원들이 본 손실 = 11억 5천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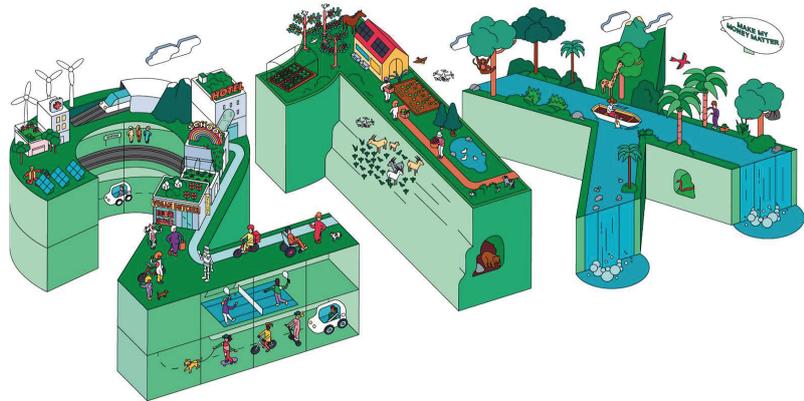
“구글은 탄소중립 노력에 진전을 보였지만, 직원인 우리들의 퇴직연금은 기후 리스크에서 안전하지 않다. 내 퇴직연금을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 그리고 이 ‘탈화석연료 펀드’를 퇴직연금 기본 옵션으로 지정하라”



### III. 기후퇴직연금 캠페인

Plan 1.5

해외 사례 (영국)



- 영국 MMMM(Make My Money Matter)의 기후퇴직연금 캠페인
- 퇴직연금을 기후금융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개인이 채식과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이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보다 '21배' 더 크다
- 개인이 가진 가장 큰 목돈인 퇴직연금으로 기후금융 실천에 나서는 것은, 기업과 산업, 경제 전체를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 2022년 기준, 영국 퇴직연금의 43%가 금융배출량 넷제로 목표를 세우고 2030년 중간 감축 목표 수립

19

### III. 기후퇴직연금 캠페인

Plan 1.5

기후퇴직연금 3단계

## 기후퇴직연금 3 단계

1

기후대응 목표에 부합하는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공시 및 보고할 것

2

탈화석연료 투자를 포함해 기후대응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 기준을 제시할 것 (금융상품의 기준 도입)

3

기후 리스크 지표를 지속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가입자들에게 공개할 것

20

*Plan 1.5*

감사합니다

sooyoun@plan15.org



# 금융산업의 기후공시 : Scope 3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김 태 한

한국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 금융산업의 기후공시: Scope 3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 기후 민스키 모멘트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경제리스크이자 금융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마크 카니 (Mark Carney)

-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학사/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 골드만삭스
- 캐나다 재무부 수석부장관
-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2008-2013)
- 영국 중앙은행 총재 (2013-2020)
- G20 금융안정위원회(FSB)의장 / TCFD 도입
- 유엔 기후변화특사
-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GFANZ)

### 기후 민스키 모멘트(climate minsky moment)

- 2015년 마크카니 전 영란은행장이 “Breaking the Tragedy of the Horizon – climate change and financial stability” 연설에서 처음 언급
- 민스키 모멘트: 긴 호황 끝에 자산 가치가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의미
- 기후 민스키 모멘트: 기후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의미
- 투자자들이 비록 현재는 기후리스크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저탄소 전환을 인식하게 되면, 기후리스크에 노출된 자산 가치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음
- 이러한 재평가에 따른 자산 가치 손실이 일정한 임계점을 넘게 되면,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붕괴되는 기후 민스키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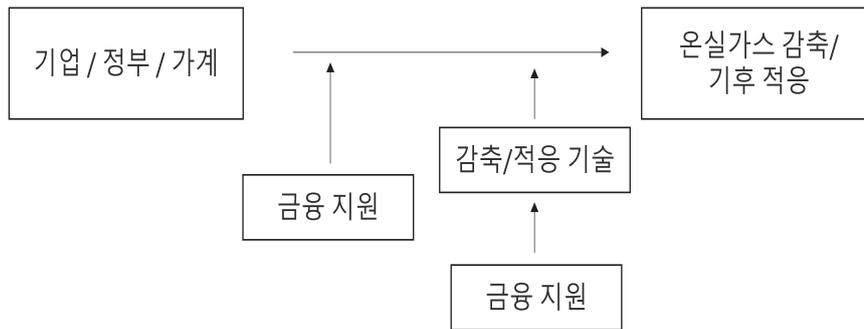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 금융이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과거 금융은 기후변화를 투자 또는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후금융은 정책금융을 포함한 일부 금융기관의 문제로만 취급되었습니다.

기후금융(탄소금융)에 대한 기존 관점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 금융이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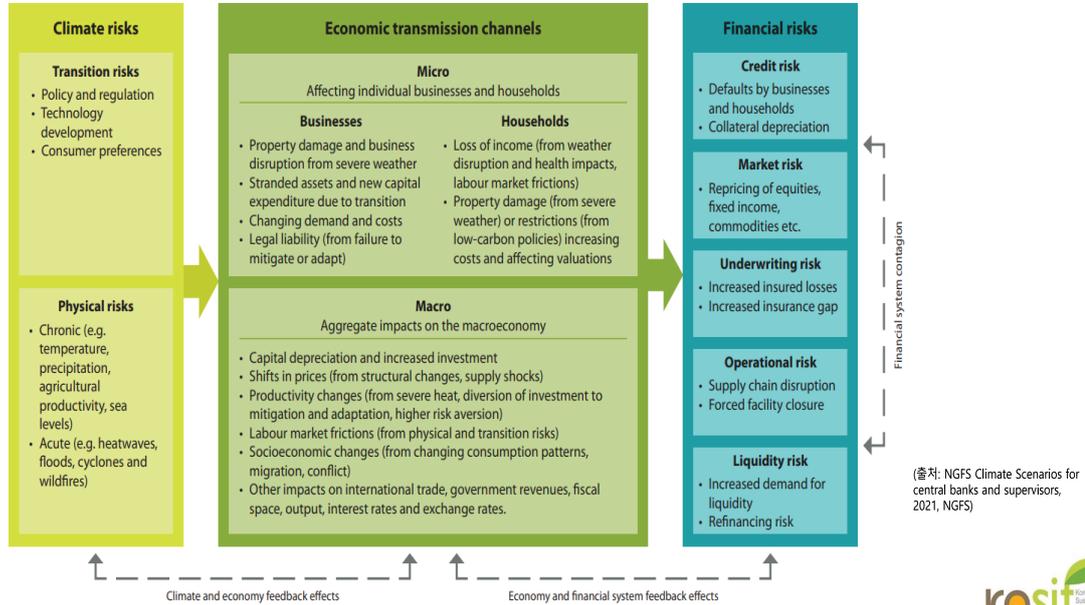
이제 금융은 기후변화를 투자/지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후금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추가



## 금융이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전환리스크와 물리적리스크는 실물경제를 거쳐, 실물경제에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상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 기후위기, 금융감독정책의 핵심으로 부각

전세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금융감독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 전세계 165개 주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 및 국제결제은행, 세계은행 등으로 구성 ('24.11.1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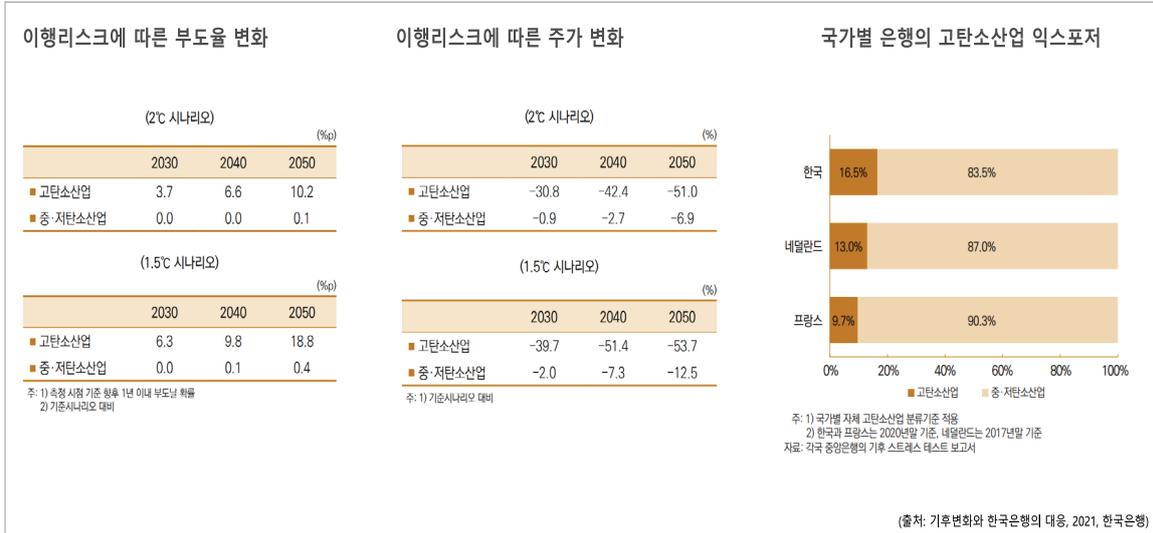
  - NGFS는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이 주축으로 현재 전 세계 144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IMF,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 OECD 등 21개 기관이 옵저버로 참여
  -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가입
- ▶ 2019년 4월, 녹색금융 촉진에 관한 권고안 발표

  - 권고안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고안의 주 대상은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기관이며, 정책입안자를 위한 권고도 포함되어 있음
  - 권고안 1: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금융안정성 모니터링 및 미시적 감독에 반영
  - 권고안 2: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트폴리오 관리에 반영
  - 권고안 3: 정보격차 줄이기
  - 권고안 4: 인식과 지적역량 구축 및 기술지원과 지식공유 장려
  - 권고안 5: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후와 환경 관련 정보공시체계 구축
  - 권고안 6: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지원



## 국내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이행(전환) 리스크로 인해 고탄소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국내금융기관의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금융기관의 Scope 3 관리의 중요성

## 금융배출량 산정의 중요성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의 전환리스크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ext{Attribution factor}_c = \frac{\text{Outstanding amount}_c}{\text{Enterprise Value Including Cash}_c}$$



금융기관의 Scope 3 관리의 중요성

## 금융배출량 산정의 중요성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의 전환리스크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ext{Attribution factor}_c = \frac{\text{Outstanding amount}_c}{\text{Enterprise Value Including Cash}_c}$$



금융기관의 Scope 3 관리의 중요성

## IFRS 지속가능성공시기준과 금융배출량

IFRS(국제회계기준)재단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은 상장금융사에 금융배출량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FRS 지속가능성공시기준 S2 (기후공시)**

**금융배출량**

B58 금융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그러한 활동과 연관되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위험 및 기회에 직면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거래상대방, 차입자 또는 피투자자는 기술 변화, 공급 및 수요 변화, 정책 변경과 관련된 위험에 취약할 수 있고, 이는 해당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위험 및 기회는 신용 위험, 시장 위험, 평판 위험 및 기타 금융 및 운영 위험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 위험은 점차 엄격해지는 탄소세, 연료 효율 규정 또는 기타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금융 고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기술 변화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어함에 따라 평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상업 및 투자 은행,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 등 금융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금융배출량을 측정하여 점차 이러한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값은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익스포저 및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이 기업의 금융 활동을 어떻게 적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B59 문단 29(1)(a)③에 따라 기업은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스코프 3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배출량 포함)을 공시한다. 다음 금융 활동 중 한 가지 이상에 참여하는 기업은 추가로 카테고리 15 배출량 또는 '금융배출량'으로 알려진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한다.

- (1) 자산운용(문단 B61 참조)
- (2) 상업은행(문단 B62 참조)
- (3) 보험(문단 B63 참조)

B60 기업은 기업의 금융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문단 29(1)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자산운용**

B61 자산운용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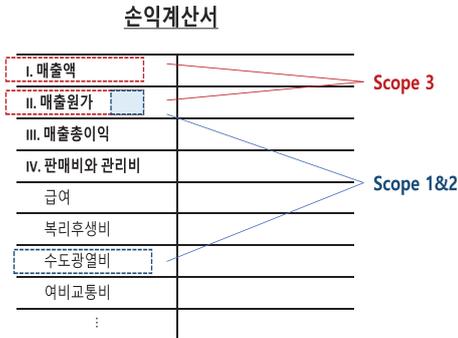
- (1) **스코프 1, 스코프 2 및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세분화된 절대 총금융배출량**
- (2) 문단 B61(1)의 세분화된 각 항목에 대해, 금융배출량 공시에 포함된 운용자산(assets under management, AUM)의 총액(재무제표 표시통화로 표시)
- (3) 금융배출량 계산에 포함된 총AUM의 백분율. 백분율이 100% 미만인 경우, 기업은 자산 유형 및 관련 AUM 금액 등 제외된 부분을 설명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4) 금융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투자 규모와 관련하여 기업의 배출량 비중을 할당하는 데 사용된 할당 방법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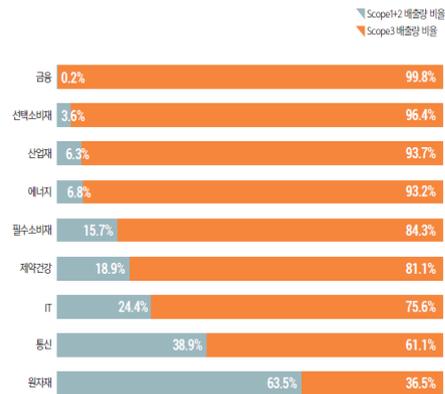
금융기관의 Scope 3 관리의 중요성

## IFRS 지속가능성공시기준과 금융배출량

기업의 Scope 3 배출량 정보는 기업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IFRS(국제회계기준)재단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은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산정 시, 금융대상 기업의 Scope 3 배출량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별 Scope 1+2 vs Scope 3 배출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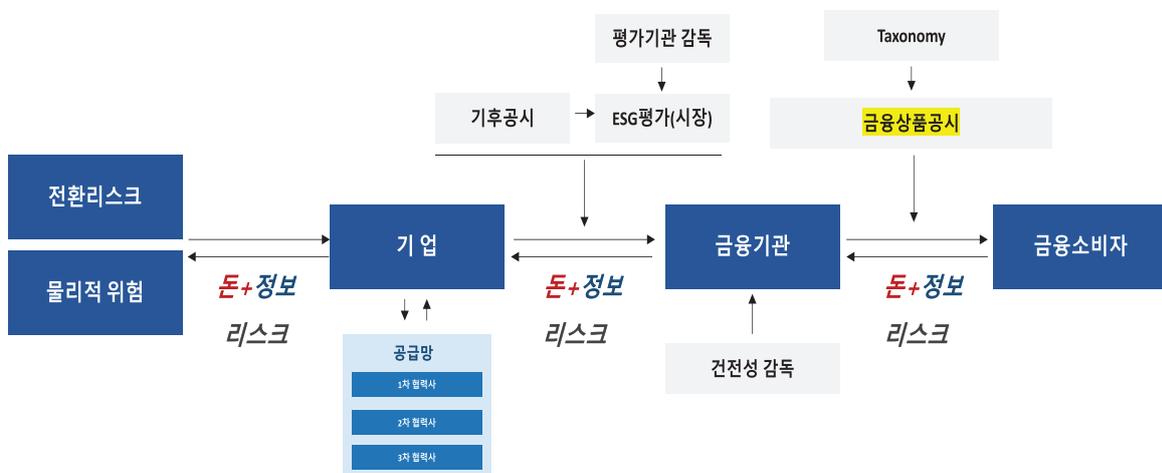
(출처: CDP한국보고서)



금융상품 공시의 필요성

## 금융소비자의 기후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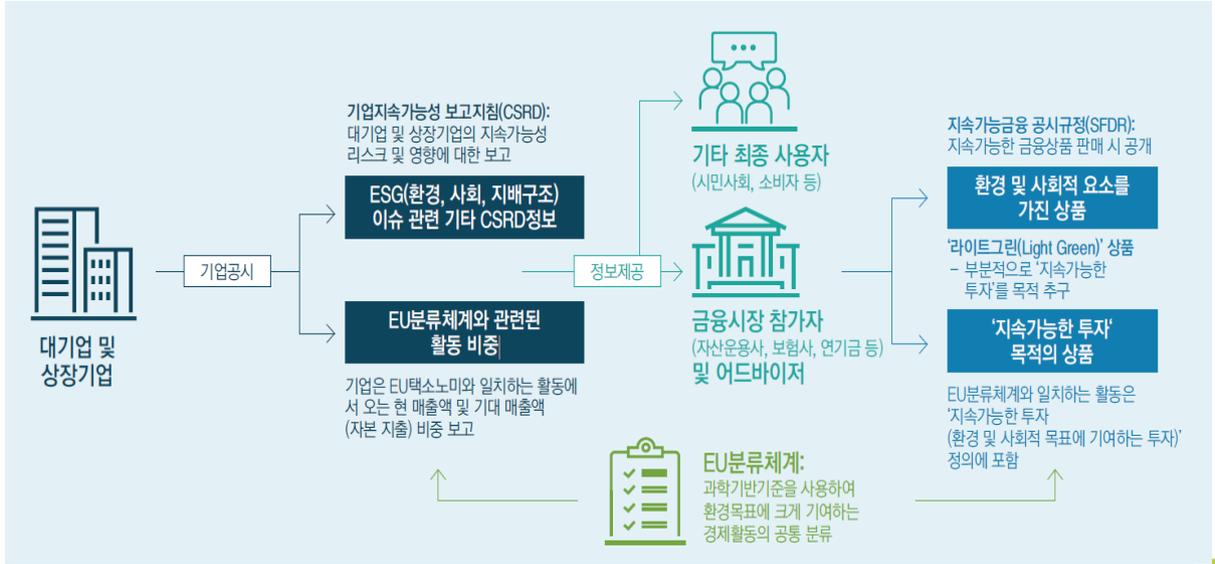
기업의 기후리스크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최종 소비자인 금융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기후공시도 필요합니다.



금융상품 공시의 필요성

#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EU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을 통해, 금융상품의 기후리스크와 지속가능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공시의 필요성

#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EU SFDR은 금융상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화석연료 익스포져 등을 금융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U SFDR - 주요 부정적 영향(PAIs) 지표 및 산정방식			
적용 대상	산정방식	산정방법론	비고
투자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 \sum [(\text{피투자기업 대상 투자금액의 현재 가치} / \text{피투자기업 기업가치}) \times \text{피투자기업 총 배출량}]$	Scope 1, 2, 3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 발자국	$= \frac{\sum [(\text{피투자기업 대상 투자금액의 현재 가치} / \text{피투자기업 기업가치}) \times \text{피투자기업 총 배출량}]}{\text{총 투자금액의 현재 가치}}$	
	피투자기업 집약도	$= \sum \left[ \frac{\text{피투자기업 대상 투자금액의 현재 가치}}{\text{총 투자금액의 현재 가치}} \times \frac{\text{피투자기업 총 배출량}}{\text{피투자기업의 보고연도 매출액}} \right]$	
	화석연료 관련 기업 익스포져	$= \frac{\text{화석연료 관련 기업 투자 비중}}{\text{화석연료 관련 피투자기업 대상 투자금액의 현재 가치} / \text{총 투자금액의 현재 가치}}$	
	비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중	$= \frac{\text{피투자기업의 재생에너지 대비 비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중}}{\text{비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량} / \text{총 에너지 소비 및 생산량} (\%)}$	
	에너지 소비 집약도	$= \frac{\text{(기후 영향이 큰 산업부문 내) 피투자기업의 매출액 대비 에너지 소비량}}{\text{에너지 소비량} (\text{GWh}) / \text{매출액} (\text{million EUR})}$	
부동산	에너지 비효율 부동산 익스포져	$= \frac{[(\text{EPC}^{1)}\text{가 C 이하이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된 부동산 자산의 가치}] + (\text{PED}^{2)}\text{가 NZEB}^{3)}\text{ 미만이인 부동산 자산의 가치}]}{\text{EPC 및 NZEB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부동산 가치}}$	Directive 2010/31/EU 근거 규정 참고

Note 1)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에너지 성능 인증서 2) Primary Energy Demand, 1차 에너지 소비 3) Near Zero-Energy Building, 제로에너지빌딩

(출처: 딜로이트 안진 정리)



금융상품 공시의 필요성

#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EU SFDR은 금융상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화석연료 익스포저 등을 금융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U SFDR - 주요 부정적 영향(PAIs) 지표 및 산정방식			
적용 대상	산정방식	산정방법론	비고
투자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 \sum [( \text{피투자기업 대상 투자금액의 현재 가치} / \text{피투자금액 기업가치} ) \times \text{피투자기업 총 배출량}]$	Scope 1, 2, 3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발자국	$= \frac{\sum [ ( \text{피투자기업 대상 투자금액의 현재 가치} / \text{피투자금액 기업가치} ) \times \text{피투자기업 총 배출량} ]}{\text{총 투자금액의 현재 가치}}$	
	피투자기업 집약도	$= \sum \left( \frac{\text{피투자기업 대상 투자금액의 현재 가치}}{\text{총 투자금액의 현재 가치}} \times \frac{\text{피투자기업 총 배출량}}{\text{피투자금액의 보고연도 매출액}} \right)$	
	화석연료 관련 기업 익스포저	= 화석연료 관련 기업 투자 비중 = 화석연료 관련 피투자기업 대상 투자금액의 현재 가치 / 총 투자금액의 현재 가치	
	비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중	= 피투자기업의 재생에너지 대비 비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중 = 비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량 / 총 에너지 소비 및 생산량 (%)	
	에너지 소비 집약도	= (기후 영향이 큰 산업부문에) 피투자기업의 매출액 대비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 소비량(GWh) / 매출액 (million EUR)	
부동산	에너지 비효율 부동산 익스포저	$= \frac{[(\text{EPC}^1 \text{가 C 이하이며 } 2020\text{년 } 12\text{월 } 31\text{일 이전에 건설된 부동산 자산의 가치}) + (\text{PED}^2 \text{가 NZEB}^3 \text{ 미만인 부동산 자산의 가치})]}{\text{EPC 및 NZEB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부동산 가치}}$	Directive 2010/31/EU 근거 규정 참고

Note 1)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에너지 성능 인증서 2) Primary Energy Demand, 1차 에너지 소비 3) Near Zero-Energy Building, 제로에너지빌딩

(출처: 딜로이트 안진 정리)



금융상품 공시의 필요성

# 금감원 ESG 펀드 공시기준

금감원은 2023년 10월, ESG 펀드 공시기준을 발표했으나 기후리스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

2023.10.6(금) 오전 배포 2023.10.5(목)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책임자 국 장 김호희 (02-3145-6700)  
자산운용제도팀 담당자 팀 장 임민진 (02-3145-6717)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

- 투자목적 관련 등 중요성분 사전관리, 투자전략 이행내역 등 운용성과 사후보고를 통해 ESG 펀드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기대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233월부터 ESG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준수 유도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등 TF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앞으로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임을 표명하는 펀드는,
- 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 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이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되며, 10월내 관련 기준 및 식의 개정을 완료하고, 일체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작성신고 접수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을 통해 투자자는 ESG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투자결정을 할 수 있으며,
-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ESG 펀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공시항목별 작성 기준**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 투자대상의 선정기준·절차, ESG 평가방법 및 내용 등 해당 펀드의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특히, ESG 평가방법은 자체평가와 외부 평가로 구분되고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방법 등 상세내용을 기재토록 하여 투자 전략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운용능력]** 자산운용사의 ESG 펀드 운용전문성과 관련된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정보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SG에 특화된 정보'를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운용능력의 ESG 펀드 운용능력, ESG 평가분석업무 관련 전문직원의 운영 여부 등
- [투자위험]**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의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유의사항에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 투자대상자산의 ESG 평가등급의 저조, 투자전략의 이행내역 등이 운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 하락 등 ESG 펀드의 투자전략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특수위험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 예)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의 하락이나 환율노출 여부 등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등
- [변수 및 수수준]** 외부의 ESG 평가결과 활용을 위해 펀드재산으로 평가비용 지급 시 구체적인 계약내용·지급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운용실적]** ESG 투자전략의 이행현황을 기재하고, 비교·참고 지수 활용 시 해당 지수와 운용성과를 비교 설명해야 합니다.
  - 특히, 적극적 주주활동을 주요전략으로 표명하는 펀드는 주주 활동 실적 내역 등 이행현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언

## 기업 · 금융상품 공시 도입

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상품의 기후리스크에 대한 공시 및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의 기후리스크 판단의 기본이 되는 기업 기후공시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 기업 기후(지속가능성공시)의 조속한 도입

-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금융 대상이 되는 기업의 기후정보 공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함

### Scope 3 공시(금융배출량 포함) 의무화

- 기후공시 도입 시,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공시도 함께 도입 필요
- 기업의 Scope 3 배출량 공시도 함께 도입되어야 함

### 지속가능 금융공시 도입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금융상품 기후리스크 공시 도입 필요
- 현재 단편적으로 진행 중인 ESG 펀드 공시 정교화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고려 가능

###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감독 관련 법적 기반 마련

- 금융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기후리스크 관리 권한 명문화 필요
- 은행업법, 보험업법 등에 기후리스크 관리 명문화 필요



감사합니다





# 토 론 1



이 기 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퇴직연금의 투자 방향성 설정과 수익률 제고의 균형

-사무금융노조 이기철 수석부위원장

## [서론]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 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퇴직연금은 막대한 운용 자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의 투자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수익률 제고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금융노조는 퇴직연금을 공적기구를 통하여 기금으로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기금의 관리는 물론이고 특히 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후를 더 크게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론문은 기후위기 대응과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라는 두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을 분석하고, 두 관점사이의 균형 있는 논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1. 퇴직연금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막대한 자산 규모는 기후금융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 1) 탈탄소 경제로의 투자 방향 전환

퇴직연금은 화석연료 산업과 같은 고탄소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및 녹색산업에 자금을 유입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 2) 장기적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는 금융 리스크를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 기후리스크에 취약한 자산에 투자할 경우 연금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금융으로의 전환은 오히려 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2.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

퇴직연금의 본질은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용수익률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1) 고수익 자산군의 중요성

퇴직연금은 수익성을 위해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 화석연료 산업은 여전히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급진적 투자 배제는 연금의 수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수익률과 노동자 노후의 상관관계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가장 큰 목돈 중 하나로, 수익률 하락은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적 관점을 고려하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3. 기후위기 대응과 수익률 균형의 필요성

### 1)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퇴직연금의 투자 전략은 기후위기 대응과 수익률 제고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녹색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기업이나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도 투자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 단계적 전환 전략

퇴직연금의 기후금융 전환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고수익 자산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녹색산업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성있고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실행 방안

### 1) 퇴직연금 운용상 친환경 디폴트옵션 도입

퇴직연금 운용에서 노동자가 투자의 주체로서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디폴트옵션으로 친환경·기후위기 대응 관련 옵션을 도입한다면, 노동자가 자연스럽게 환경에 기여하는 투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자신의 연금 자산을 기후위기 대응에 활용하면서도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가지 실행 방안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 [디폴트옵션으로 친환경 옵션 설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펀드: ESG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설정.

-재생에너지 및 탄소 저감 프로젝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포함.

-그린 채권(Green Bonds): 환경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된 채권에 투자하는 옵션을 도입.

### 2) 노동자의 선택을 강조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더라도 노동자는 필요에 따라 투자 옵션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폴트로 친환경 옵션이 설정되면, 노동자는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 3)노동조합의 역할

- ①교육 및 홍보: 노동자들이 친환경 투자 옵션의 중요성과 장기적인 이점을 이해하도록 교육에 집중.
- ②기업과 교섭: 퇴직연금 운용사의 투자 정책에 친환경 옵션이 포함되도록 기업과 교섭하고 영향력을 행사.
- ③모니터링 및 감시: 투자 옵션이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지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 사항을 요구.

### 4)관련 사례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연기금(예: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이 ESG와 친환경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에도 기여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노동자는 자신의 경제적 안정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교섭과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 [결론]

퇴직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 대신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과 기업, 금융기관 등은 협력하여 퇴직연금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금융노조는 퇴직연금을 공적기금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률 제고로도모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투자 방향성에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과 운용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토 론 2



최 용 환

NH-Amundi 자산운용 ESG리서치 팀장



**MEMO**

**MEMO**

# 토 론 3



지 현 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토론문

지현영 변호사 (녹색전환연구소)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은 기후로 인한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거래 상대방, 차입자 또는 피투자자는 기술 변화, 공급 및 수요 변화, 정책 변경과 관련된 위험에 취약할 수 있고, 이는 해당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위험 및 기회는 신용 위험, 시장 위험, 평판 위험 및 기타 금융 및 운영 위험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탄소중립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으로, 이는 금융기관이 신용 공급(대출, 주식,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배출량이다. 금융배출량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직접 배출량보다 평균 700배 이상 높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금융기관이 금융배출량을 파리협약의 1.5°C 목표에 맞춘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야 하고, 속도와 빠른 대응이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관리는 스스로의 존속뿐 아니라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산정한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기업신용) 추정치를 보면 2023년 기준 1억 5,700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21.9%를 차지한다. 2024년 4월말 기준, 20개 국내은행 중 13개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이중 11개사가 2030년까지의 금융배출량을 2019~22년 대비 26%~48%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할 수 있을까? 코시프의 '2023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기업 지원 규모가 33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금융기관은 여전히 기후에 해가 되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금융배출량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누락되거나 과소 보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투명성 부족은 금융기관 자체의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축소시킨다.

다행히 투명성, 비교가능성 등에서 미진했던 산정기준과 공시기준이 정교함과 표준화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탄소회계금융 협회(이하 PCAF)는 상장주식 및 회사채,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용부동산, 모기지, 자동차대출, 국채 등 거의 대부분의 자산유형에 대한 금융배출량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전세계적으로 의무 공시가 제도화되어 가며 3대 글로벌 공시기준 중 유럽연합의 ESRs와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IFRS S2 공시기준은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을 비롯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KSSB)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인 IFRS S1, S2에 기반하여 유사한 구성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ESG 공시기준의 글로벌 베이스라인(기준선)을 표방하는 ISSB 공시기준보다 최소한 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모순이며,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을 비롯한 Scope 3 배출량을 공시 의무화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국내 여건에서 Scope 3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 또한 글로벌 베이스라인을 회피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녹색금융상품 취급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높은 제조업 대출 비중과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구조가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감축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들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매우 높아서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부실해질 경우 이것은 지방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금융배출량 산정,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이 미진하다. 일본의 경우 2021년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 완화를 배경으로 시스템 판매, 비즈니스매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028년부터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탄소부과금을 도입할 예정임에 따라 지방은행들은 투융자처에 대한 탄소중립 지원을 기후 관련 리스크 저감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를 차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결과제가 있겠지만, 여기서도 중소기업의 기후 관련 신빙성 있는 정보공개 확보를 위한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 대기업의 조속한 Scope 3 공시 의무화와 중소기업용 KSSB 기준 제시 등이 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그 중에서도 기후 공시 의무화는 기후금융의 마중물이자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아쉽게도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과 금융노조의 목소리가 부진한 것 같다. 미국 대선 이후 로드맵 제시를 슬쩍 뒤로 미루고 관망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금융노조의 적극적인 요구가 절실하다.

## 토 론 4



장 지 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사무관



**MEMO**

**MEMO**